
한미관계 : 현황 및 향후 전망*

Stephen W. Bosworth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을 초대해준 세계경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은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연구 분석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연구원으로서, 한국정부 및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화되어 가는 국제경제의 도전에 응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전야와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본인은 한미 양국 관계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본인이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에게 있어 한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양자관계는 없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관계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국간의 관계는 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키워나가고 유지해가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의 근원을 잘 살피고,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기반을 두고 관계가 유지되며, 공동의 가치를 반영하고,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한미관계에 있어 먼저 경제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한다. 미국은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군사동맹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경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현재 한국경제의 전망은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나아졌다. 한국은 1997년말 시작된 금융 및 경제 위기로부터 실로 놀라운 회복을 거둔 것이다.

- 경제성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98년에 마이너스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999년에는 9~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1998년 7.5%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은 올해 1% 미만을 기록하였다.
 - 1998년 100억불 미만이었던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700억불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000억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1997년에는 80억불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1998년에는 400억불의 흑자를, 그리고 이어 1999년에도 230억불이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한국의 증시는 올 한해에만 75%를 넘게 성장했다.

- 한국 원화의 가치는 1998년 달러당 2,000원까지 떨어졌으나 올해에는 달러당 1,150원선 이하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 무디스社에서는 올해 초 한국의 투자등급을 상향조정한데 이어, 현재 한국의 국제 신용도 등급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분명히 한국 국민은 국가경제가 이러한 놀라운 회복을 시현한 것에 대해 깊은 신뢰를 받을 만 하다. 한국정부는 금융 및 기업부문에서 중요한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자들과 기업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는 한국인들의 근로윤리가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해 한층 높은 존경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회복은 효과적인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리더십과 미국, 일본 및 다른 선진국들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의지가 국제사회의 긴급금융지원과 단기외채의 상환일정 조정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 회복은 지금보다 더디게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그 활력 역시 훨씬 미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2년간 한국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한국경제의 모습을 변모시켰다. 이제 한국 경제는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투명하며, 보다 시장주의원리에 바탕을 두게되어 국제시장에서 보다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경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은 매우 분명하다. 취업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지출과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출도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주식시장도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지난 36년간의 누적된 해외직접투자금액과 지난 2년간에 약정된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투자자의 신뢰도도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매우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몇 달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직은 삼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매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자만할 때가 아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의 취약성을 더욱 강조하게 하기도 한다. 시장과 자본을 향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은 매우 냉혹하다. 어떤 나라이든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투명성,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징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은, 특히 올해에, 대체적으로 양호한 세계경제 상황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미국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시장이 강한 경제성장을 구가하였으며 주요 상품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지만, 훨씬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를 해두지 않는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조조정 및 개혁은 완결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금융기관들도 한국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향후 몇 개월, 몇 년간 한국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금융부문의 개혁에서 한국은 분명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러 부실금융기관이 폐쇄되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기관이 통합·설립되었으며 각종 기준이 강화되었다. 은행권의 부실자산 매입 및 은행의 자본조정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한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초기에 발표된 금융권 부실자산의 규모가 너무 과소평가되었다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은 대우위기로 인해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되었지만, 한국정부가 이처럼 필요시 추가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국내의 신뢰도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정부가 이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은행의 자본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한국의 5대 은행 지분의 90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권의 와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들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은행을 민영화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계속해서 정부가 은행의 소유권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은 결코 건전한 상태라 할 수 없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구조조정을 거친 이들 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추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도 이들 은행 민영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주요은행 중 하나인 제일은행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이 현재 미국계 투자자들에게 매각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은행들에 있어서도 상당 규모의 해외자본 유입이 진행되었다. 은행부문에서의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지는 것은 이를 통해 현대적인 신용분석 및 리스크 평가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이롭다고 본다.

최근 몇 달 동안, 대우사태로 인해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우그룹의 부도규모가 사상 유례가 없이 큰 것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심각한 체계적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우사태에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노력은 대우의 주요 자회사에 대한 재무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부분의 은행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납세자들은, 앞으로 금융권에서 대우의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우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무 구조조정 만으로는 대우 자회사들의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데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전반적인 기업 운영상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대우자회사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청산됨으로써 귀중한 자본을 더 이상 축내는 일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만이 새로운 주인에게 매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은행들이 비금융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없다.

대우사태를 통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명백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구조조정을 미루면 참담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채감소,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이야말로 구조조정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대우사태를 통해 또 다른 분야의 어려움이 부각되었는데, 바로 투자신탁회사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 투신사들은 현재 액면가를 훨씬 밑도는 대우채권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이들 투신사들은 투자 고객들에게 확정금리배당을 약속했기 때문에 마치 은행처럼 행동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투신사들은, 대우채권처럼 변동가치를 지닌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뮤추얼펀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었다. 투신사가 애당초 약속했던 금리로 배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투자자들 사이에 서게 되면 당장 현금인출사태가 벌어져 투신사들의 자금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 투신사들의 자산을 매일 매일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신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자산의 시장가 평가 의무제도는 가급적 빨리 모든 투신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투신사의 자산가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앞으로 투신사들은 더 이상 신뢰도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현재 투신사들의 문제는 또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은행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신사들의 영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대우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권으로 하여금 채권시장에서 최후의 보루로써 매입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튼튼하고 투명한 채권시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의 장기적인 이해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채권시장이 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주요 교역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연간 500억불에 달하는 양자교역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8번째로 큰 교역파트너이다. 한미 양국은 양자간 교역관계에 있어서 지난 2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한미 양국은 이미 1년 전에 자동차 협상을 마무리짓고 현재 제약 부문과 같은 다른 분야의 협상에서 진척을 보고 있다. 농업교역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WTO에 문제를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세계시장이 계속해서 자유화되는 데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WTO의 성공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비록 시애틀 각료회담에서 새로운 WTO 라운드를 출범시키는 데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개방된 세계무역체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은 성공적인 WTO 라운드를 통해 보다 큰 번영과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문제, 전자상거래의 無관세화 및 정보통신협약 연장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정부와 폭넓은 합의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정부는 또한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농업 및 반덤핑 등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WTO 라운드를 진척시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원한다.

이제 한미 양국의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인 안보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한미 안보 동맹은 오랜 기간 동안 양국 관계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지해 왔다. 이 같은 동맹 및 방위상의 파트너십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조성태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엔 미국 국방장관 간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매우 굳건하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억지력에만 의존하여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양국은 이제 한반도 및 역내의 보다 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시기가 되었다고 믿는다. 한국과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북한에게 포괄적인 포용정책의 기회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인 것이며 계속해서 이를 억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아울러 우리가 북한과의 상이한 체제를 군사적 대립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북한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위협을 줄이고 평화를 증진하도록 북한과 함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변화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자급자족 경제체제는 본질적으로 실패했다. 모든 측정기준에서 봤을 때, 북한의 경제상황은 몇 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의 쇠퇴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 하지만, 정책전환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유입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소요외자의 대부분은 한국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미국 및 일본은 3국의 공조 하에 북한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관해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 공동의 이해관계: 미국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는 한국 국민들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한국의 이해관계와 정책적 조율을 거칠 때에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 투명성: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도 아닌 그렇다고 평화도 아닌" 현 상황과 북한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은 우리의 의도와 역량에 대해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오해나 오판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책임소재: 한국과 미국처럼 대의정부 체제를 갖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모든

정책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자체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없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일부를 완화해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상업적, 금융적 장애물은 제거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없으며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관심사에 대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북한에게 이로운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 합의의 기본골격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의 근간이자, 최근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한 배경 및 일본이 최근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의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를 벌여놓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제치고 미·북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관한 협상을 전개하고, 한국정부와도 긴밀하게 정책목표를 조율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근본적으로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미·북간의 진정한 관계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어서, 한미 양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상호 관심사에 관한 양국의 생각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관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뿌리깊은 민주주의적 가치에서 비롯되는 모든 사안들인데 즉, 개방된 경제, 경쟁, 투명성, 책임소재 그리고 공정한 페어플레이 정신 등이 그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밀레니엄에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양국이 근본적인 가치를 수호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은 없을 것이다.

질의·응답

질문 향간의 문외한들은 최근 시애틀에서 있었던 WTO 협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무역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협상의 주요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번 WTO 협상이 쌀 시장과 그 밖의 상품 시장 개방과 관련이 있고 어쩌면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언론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번 시애틀 협상이 실패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사께서는 향후 수년간 전개될 차기 WTO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답변 귀하의 질문은 매우 광범위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시애틀의 사태는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생각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협상

과정들은 항상 복잡 미묘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완료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고 또 얼마나 여러 번 그 협상은 실패할 것처럼 보였는가? 이러한 점들을 회고할 때 WTO를 하나의 국제기관으로 창설한 것 자체 만으로서도 대단한 성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범세계적 무역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지만, 그 많은 나라들의 이해를 조정할 만한 적절한 협상 진행절차가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런 연유로 일부 국가들은 모든 협상의 주요결정이 소수그룹의 밀실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성공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 수 년 간에 걸쳐 전통적 관세장벽을 낮추게되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농업보조금 및 서비스 무역과 같이 보다 복잡한 사안들인 것이다. 전자상거래(e-commerce)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또한 무역협상에 있어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번 시애틀 각료회의는 협상 결론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향후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전반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였다. 따라서 의제가 확정되기 전까지 어느 특정문제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그 이유는 이해당사국들이 한 문제에 대한 해결대가로 다른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역에 관련한 현안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든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나라들의 국내 경제활동에서 이 무역부문이 차지하는 위치가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를 정도로 무역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무역의 對GDP 비율이 과거의 약 8%에서 13%로 증가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거의 25%에 달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이 무역문제는 더이상 학계나 정부관료들만의 추상적 과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의 일반시민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지난 번 시애틀 회의는 결국 뉴라운드 협상의제에 대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그것이 협상의 종국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무역자유화를 향한 추진력을 상실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을 감당하기에는 이 무역문제가 모든 나라 경제에 있어 너무도 중요하다. 따라서 신년 초부터 제네바나 기타 장소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며, 비록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장관급 회의도 또다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으로서서는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지난 번 발생한 시애틀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무역라운드의 파국을 맞이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질문 최근 마닐라에서 있었던 ASEAN 정상회담시 별도로 한·중·일 3자회담이 개최되었는 바, 이는 동북아협력체제 구축을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사님의 견해는?

답변 우리가 동북아 3국의 관계개선을 목격한다는 것은 커다란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이들 국가간 관계개선의 승자입장에 놓일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 양국과 매우 중대한 안보 체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과는 매우 바람직한 관계로 진전되도록 시도하고 있다. 본인의 견해로는 이들 3

국과 보다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미국과도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모두에게는 그 만큼의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관계수립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를 새로운 상설기구화 하자는 논의는 아마도 시기상조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유럽 및 북미대륙의 경우에서 보듯이 새로운 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한다. 그 동안 서로간의 대화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분명 기본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질문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언급을 과거에 하고 있는데 대사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또 중국은 최근 한반도 통일후 미군의 주둔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관계국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사께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본인이 주한 미국대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취급하게 될 일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더 큰 신념을 갖고 이 질문에 답변하겠다. 본인 개인의 입장과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측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가상의 질문이다. 장차 한국이 통일된 후 겪게될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통일된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계속 갖게될 것이라는 점이다.

확실하지 않은 장래 시점에서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요하는 사안이다. 다시 한번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이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이해관계가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계속적인 출현이 요구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의 출현이 될 것인가는 그 당시의 여건과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전통적인 관계유지 당사국들의 여망과 바람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질문 한국 국민들은 최근 아무런 진전없이 끝난 베를린 북·미회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대사께서는 언제쯤 양국의 고위당국자 회의가 재개될 것인지, 또 재개시 그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본인은 지난 번 베를린회담이후 극적인 발표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는 상당기간동안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번 회의 때마다 극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이 대화가 전향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이 대화의 속도나 보조를 전망하거나 조절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미국의 입장여하에 달려있는 것과 같이 북한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 북한과의 접촉이 정상적인 창구를 통해 계속될 것이며, 윌리엄 페리 보고서에서 열거된 과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질문 대사의 견해로는 한국이 언제쯤 통일될 것으로 보는가? 또 미국과 북한간의 외교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답변 두 질문 모두에 대해 본인으로서 불행하게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한국이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분명히 모든 한국 국민들의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솔직히 말한다면, 본인으로서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는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가에 비하여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동안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이다.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화합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 정책의 당면목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을 축소하고 보다 큰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데 결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은 본인이 보기에 매우 길고도 힘든 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페리 보고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협상진행은 엄격한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미국으로서 북한이 안보분야, 특히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정도에 상응한 행동만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평양의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최근 수년 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이를 더 이상 진전시키는데 주저하고 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앞으로 변할 것이며 미국은 상황의 진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본인의 견해로는 한국도 장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할 책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본인은 이와 같은 한반도 여건이야말로 한국이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제도를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한국은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소요될 것이며, 이 필요자본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이 외국자본의 도입은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가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현대 자본시장 체제를 갖추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질문 한국은 현재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본인의 강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 및 국민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와 같은 성공을 다른 어느 누구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이 취한 행동은 국제간의 협력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인은 이와 같은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MF, 세계은행, ADB와 미국, 일본 및 EU국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한국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은 한국이 개혁과 구조조정을 강화한다는 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본인의 견해로는 이 방식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기관과 지원국 정부는 한국이 그 동안 기울여온 엄청난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한국이 그 동안 이룩해낸 성과에 조용히 자축할 권리가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또한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 없이는 이미 이루어 놓은 일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 개혁과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묵시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我國經濟建設中若干問題之初步研究

第一章 緒論

一、研究之動機

二、研究之範圍

三、研究之方法

四、研究之經過

五、研究之結論

六、研究之建議

七、研究之附錄

八、研究之參考文獻

九、研究之圖表

十、研究之表格

十一、研究之附件

十二、研究之說明書

十三、研究之總結

十四、研究之展望

十五、研究之附註

十六、研究之索引

十七、研究之目錄

十八、研究之序言

十九、研究之後記

二十、研究之謝詞

我國經濟建設中若干問題之初步研究

第二章 我國經濟建設之現狀

一、我國經濟建設之概況

二、我國經濟建設之成就

三、我國經濟建設之問題

四、我國經濟建設之展望

五、我國經濟建設之建議

六、我國經濟建設之附錄

七、我國經濟建設之參考文獻

八、我國經濟建設之圖表

九、我國經濟建設之表格

十、我國經濟建設之附件

十一、我國經濟建設之說明書

十二、我國經濟建設之總結

十三、我國經濟建設之展望

十四、我國經濟建設之附註

十五、我國經濟建設之索引

十六、我國經濟建設之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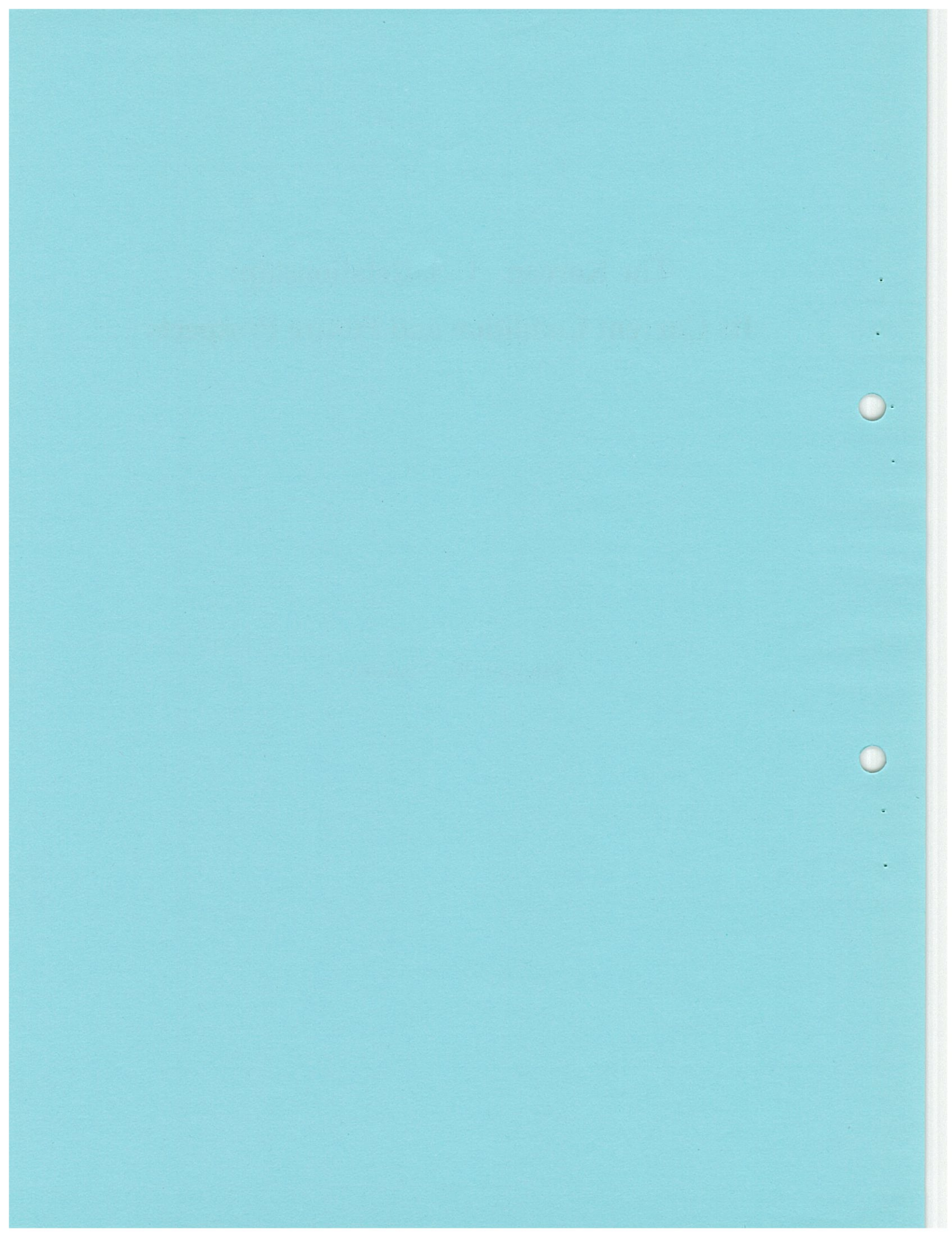
十七、我國經濟建設之序言

十八、我國經濟建設之後記

十九、我國經濟建設之謝詞

**The Korean - 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The Korean - 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I want to thank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for the invitation to speak to you this morning. The Institute is one of Korea's leading centers of research and analysis on international economic issues. It is an important resource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ackle the challenges of adapting to a globalizing international economy.

This morning, virtually on the eve of the year 2000, I would like to take stock of the Korean-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As I have stated many times in the past, no bilateral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than our relationship with Korea. I venture that the same can be said from Korea's perspective. However, relationships cannot be taken for granted. They require tending. They must be nurtured and sustained over time. We must continually examine their foundations, checking to assure that these are built on common interests, that they reflect shared values, and that they further our respective interests.

Let me begin with the economic aspect of our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has a major stake in the health of the Korean economy. Not only is Korea one of our major trading partners, but Korea's economic strength is also key to the effectiveness and strength of our security alliance. The current outlook for the economy is dramatically improved in comparison to the end of 1998. Korea has made a truly impressive recovery from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at struck in late 1997.

Economic growth is galloping ahead and will likely reach 9-to-10 percent for this year, compared with an almost 6 percent contraction in 1998.

Inflation this year is less than 1 percent, compared with 7.5 percent in 1998.

Foreign reserves are about \$70 billion, compared with less than \$10 billion in early 1998, and are anticipated to reach \$100 billion in 2000.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surged to \$40 billion in 1998 and probably will exceed \$23 billion in 1999, following a deficit of \$8 billion in 1997.

The Korean stock market is up over 75 percent this year.

The Korean won has strengthened to 1150 or less per dollar compared with close to 2000 per dollar early in 1998.

Moody's is currently reviewing Korean sovereign bonds for a possible upgrade, after restoring their investment-grade rating earlier this year.

Clearly, Koreans deserve enormous credit for the remarkable turnaround of the national economy. The Government has put in place important measures of financial and corporate reform. Korean workers and companies have made major sacrifices, and the world's admiration for the strength of the Korean work ethic has reached new highs. The Korean recovery is also an outstanding example of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leadership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strong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Korean commitment to reform and restructuring was linked to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and the rescheduling of short-term foreign debt. Absent this international effort, I suspect your recovery would have come later and perhaps been much less robust.

The economic policies pursued over the past two years have in many ways transformed the Korean economy. It is now far more open, more transparent, more market-based, and more competitive internationally. The benefits to Korea of these changes are clear: employment is rising; consumer spending and investment have increased; exports are growing strongly; the stock market is approaching record level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flowing into the country. Indee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mitted to Korea over the past two years almost equals the accumulated total of the preceding 36 years.

Confidence is growing, and that is good. But I think President Kim was right when he said a few months ago that "this is not the time to uncork the champagne. This is no time for complacency. The evolving global economy provides great benefits, but it also heightens vulnerability.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markets and capital is relentless. If a country does not keep up with rising international standards of transparency,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it risks punishment in the global marketplace. Al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Korea, particularly this year, has benefited from a generally benign international environment. Interest rates have been

relatively low, economic growth in many of your major market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rong, and commodity prices have generally been stable. While we all hope these conditions continue, it would be a mistake not to be prepared for a more difficult set of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is clearly correct, therefore, when it stresses that reform and restructuring are not yet complete and that further effort is neede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shares that judgment and will continue to watch Korea's performance closely over the coming months and years.

In the area of financial reform Korea has clearly made great strides. Many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closed, a new, consolidated institution for prudential supervision has been created, and standards have been strengthened. Substantial public funds have been committed to the purchase of non-performing loans and bank recapitalization, and the Government has said it is prepared to provide further funds if necessary. Given the widespread belief that earlier estimates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banking system may have been too low -- a belief that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Daewoo crisis -- this commitment to provide more funding if necessary is critical 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fidence.

One result of the use of public funds to recapitalize the banks has been the de facto nationalization of much of the banking industry; the Government now owns 90 percent of four of Korea's five largest banks. This was an unavoidable consequence of the need to prevent the complete collapse of the banking sector. However, it raises significant questions as to how and when the Government will divest itself from the banks and restore private ownership. Clearly, it would not be healthy for the Government to continue to own the banks for an extended period. In addition to offering domestic investors the opportunity to acquire shares in the ownership of restructured banks, foreign direct investment can be part of the privatization process. A majority interest in one of Korea's largest banks, Korea First Bank, is being sold to American investors. There has also been considerable foreign equity investment in other commercial banks.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banking sector has the advantage of stimulating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odern practices of credit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In recent months, the Daewoo crisis has underlined the essential need to continue corporate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has acted decisively in response to the Daewoo crisis, recognizing that the unprecedented size of the Daewoo default posed a systemic threat to the entire economy. Thus far, the Government's effort has focused on the financial restructuring of Daewoo's major affiliate companies. Korea's taxpayers, who already own most of the banks, will soon own much

of Daewoo as banks swap debt for Daewoo equity. However, financial restructuring alone will not be sufficient to restore the Daewoo affiliates to profitability. Major operational restructuring will also be necessary, and Daewoo affiliates must be subjected to market-based discipline. Korea's international audience will be watching closely to see whether non-viable firms are liquidated in an orderly fashion and not allowed to continue consuming scarce capital. Those that can be restructured and made profitable can then be sold to new owners. Korean banks do not have a long-term interest in owning equity in non-financial enterprises.

The lessons of Daewoo should be obvious to all Korean corporations. Delay in restructuring can bring disastrous consequences. While much has been done, further progress in debt reduction, greater corporate transparency, and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are clearly crucial.

Daewoo's troubles have also focused attention on another problem area - the investment trust companies. Some ITCs invested heavily in Daewoo paper, now worth a fraction of its face value. The ITCs have been allowed to act like banks because they promise their clients a given rate of return on investments. In fact, they are more like mutual funds because they hold assets of fluctuating value like Daewoo bonds. Whenever investors believe the ITCs may be unable to pay their promised rate of return, they rush to withdraw their money, making the ITC's cash problems even worse.

The Government has committed to the eventual solution of the ITC problem by requiring these institutions to mark their assets to market value on a daily basis. These new marks to market requirements should be imposed on all ITCs as soon as it is feasible. When the value of ITC assets is transparent, ITCs will no longer face recurring crises of confidence.

The current problems of the ITCs also threaten Korea's efforts to develop a corporate bond market and reduce the traditional heavy dependence of Korean corporations on bank credit as a source of finance. The Government's moves to stabilize the bond market and prevent a run on ITCs were perhaps necessary given the severity of the Daewoo crisis. Yet, requiring banks to act as buyers of last resort in the bond market can only be a short-term expedient and acts against Korea's long-term interest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 robust, transparent bond market. As soon as possible, bond markets should be allowed to reflect actual supply and demand.

Korea is one of the world's great trading nation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do nearly \$50 billion in two-way trade and Korea is our eighth largest trading partner. We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over the past two years in managing our bilateral trading relationship. For example, we

concluded an agreement on autos over a year ago and are now making progress on other matters such as pharmaceuticals. Our disputes on some matters, such as agricultural trade, we have agreed to submit to the WTO.

We both have a great stake in the continued liberalization of world markets and, thus, in the success of the WTO. Although ministers were not able to agree on the launch of a new trade round in Seattle, a successful WTO round undoubtedly will bring greater prosperity and economic opportunity to Korea, which has thrived under an open global trading regime. We already broadly agree with the Korean government on many issues - for instance,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duty-free status for electronic commerce, and expand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The U.S. Government also looks forward to engaging Korea and others in frank discussions on issues where our positions differ, such as agriculture and anti-dumping. We want to find a workable consensus to move the new WTO round forward.

I would like to turn now to the other critical dimension of our relationship - security. The Korean - U.S. security alliance has long been at the core of our relationship. Our combined military strength has successfully deterred North Korean aggression for nearly a half century. The alliance and our defense partnership are solid, as demonstrated by the recen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Washington between Defense Minister Cho Sung Tae and Secretary William Cohen.

Yet, our two countries are agreed that it would be a mistake to rely on deterrence alone to assur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e time is ripe to pursue a broad diplomatic effort to bring greater security to the peninsula and the regio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Japan, are offering North Korea an opportunity for comprehensive engagement. Our offer is based on the judgment that the North's military threats are real and we must continue to deter them. It is also based on the judgment that we have an opportunity, indeed an obligation, to try to peacefully resolve our differences by non-military means. What we are saying to North Korea is that it, too, has a stake in stability and peace and that we are prepared to take steps with them to reduce threats to peace.

North Korea confronts a major dilemma: it must change to survive, but the regime apparently fears that change could bring the seeds of its own demise. North Korea's autarkic economic system has essentially failed. By all standards of measurement, the North's economic condition is dramatically worse than it was just a few years ago, and the decline continues. Major changes in policy would be required to turn around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policy change would also have to be accompanied by an infusion of outside resources. As a practical matter, the bulk of

those outside resources would probably have to come from South Korea.

President Kim Dae-jung has made it clear that Korea will pursue peace and stability in the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practical cooperation with the North. To support those aims,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joined to try to find ways to help North Korea solve its dilemmas. I'd like to restate the principles that guide American thinking on this topic:

SHARED INTERESTS. While the United States has vital interests in Kore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people have even more at stake. Accordingly, U.S. interests are best advanced by coordinating our policies with those of the Republic of Korea.

TRANSPARENCY. Given the long-standing situation of "not war, but no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opaquenes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as transparent and open as possible about our intentions and capabilities. We must avoid misapprehension and miscalculation.

ACCOUNTABILITY. Democratic countries with representative government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accountable to an informed citizenry. Our governments must provide our citizens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bout the policies that they carry out on their behalf.

In the end, the North cannot solve its dilemma through marginal change. The easing of American sanctions will remove certain commercial and financial roadblocks, but North Korea must take major steps of its own to significantly change its economic condition.

Yet, the North cannot, and will not, change overnight. We will continue to take steps beneficial to North Korea commensurate with North Korea's accommodations to our concerns. This is a basic tenet of the Agreed Framework, President Kim Dae-jung's policy, the recent U.S. steps on sanctions easing, and Japan's recent overtures toward the North.

We are aware that North Korea would like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It would prefer to normalize U.S.-North Korean relations at the exp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 can forthrightly say to this audience that such a scenario cannot happen. We seek to move toward a more norm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hile addressing concerns about the North's missiles and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North and close coordination on policy goals with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United

States cannot have a genuinely norm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until South and North fundamentally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m.

In conclusion, our two nations surely will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on economic and security matters. Our thinking on mutual concerns is similar due to our shared values. The most important of those values is our support for democracy and all that flows from deep-rooted democratic values: an open economy, competitio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a sense of fair pla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face many challenges together in the new millennium, but there is no challenge we cannot overcome if we remain true to our basic values.

Questions & Answer

Q. I don't think laymen on the street fully understand what happened in the WTO negotiations in Seattle: what is going to happen and what is the mechanism of the trade negotiation. All they know is that the WTO negotiation is somehow connected to opening of rice and other markets and maybe, have a distant memory of the Uruguay Rounds. The media has been reporting many negative things and many believe that the WTO negotiation in Seattle is a failure. How do you see the next rounds of the WTO proceed in the forthcoming years?

A. It is a very broad and difficult question in part because the events of Seattle are still very recent and we have not had much time to digest the consequences of what occurred there. The processes of global trade negotiations have always been complicated. You recall how long it took to complete the Uruguay Round and how many times it appeared that the Round was bound to fail. The creation of the WTO as a new international institution was in itself, a considerable achievement. As a part of that, we have had a tremendous expansion of the number of countries involved in global trade negotiations. I am not sure that we have yet found a process or a procedure for involving all of those countries in negotiations of interest to them in an appropriate fashion. Thus, some countries developed a feeling that all the important decisions are being taken by a small group in the back room.

Also, we are, to some extent, a victim of our own success. As we have brought down conventional tariff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e are now left with trade issues that are much more complicated: agricultural subsidies and trade in service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e-commerce, also poses new challenges to trade negotiations.

Seattle was not intended to produce negotiated results; it was intended to produce an overall

agenda for subsequent negotiations. And until that agenda is fixed, it is very difficult to have negotiations on specific problems because countries insist on being able to identify possible trade-offs between one set of issues and another set of issues.

Also, these trade issues, in general, have become much more sensitive in domestic politics in most countries because trade has now expanded to the point at which it is a major component of domestic economic activity in virtually every country. Even for the U.S., our exports have risen as a percent of our GDP, from around 8 percent to now, 12 percent. As for Korea, exports account for almost 25 percent of the Korean GDP. So these issues of trade are no longer abstract subjects for academic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y have real importance to average citizens in our countries and therefore, have acquired great political significance.

At Seattle, we found in the end that we simply could not reach an agreement on agenda for a new round. But that is far from being the end of the exercise. Trade is far too important to all of our economies for us to risk what might happen with the loss of momentum toward greater liberalization. Thus, efforts will continue in Geneva and elsewhere beginning in the New Year. There will have to be another ministerial meeting at some point, though it is rather difficult to predict when that might be. However, I am confident that despite elections and despite the events in Seattle, we have not seen the last of a new global trade round.

Q. In the margin of the Manila Summit, a meeting of Japan, China and Korea has taken place. The trilateral summit has been qualified to be a historic step towards the beginning of the Northeastern Asian cooperation. What is your assessment?

A. First, it seems to me that it is to the great advantage of the U.S. to see a process of improving relations among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we can only be net winners from that improvement. We have important and vital security relations with both Japan and Korea. We are attempting to develop a very engaging relationship with China. I think the more that these countries talk among themselves and to us, the better off for all of us. I think we look forward to seeing further development of these kinds of relationships. I think it is probably somewhat premature to talk about new institutions: building of new institutions, as we have seen in Western Europe and in North America, takes a long time. But in the meantime, increased dialogue is, clearly, an essential element.

Q. In the past, Senior U.S. officials have referred to the desirability of maintaining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reunification. Could you comment on specific reasons for

maintaining U.S. military presence in a post-reunification scenario? The PRC has recently underlined that the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peninsula should be negotiated at an appropriate time. Can you explain the reasons for ROK and PRC's behaviors?

A. I can address this question with a growing confidence that it will not be a problem that I would have to deal with while I am the ambassador in Korea. So, for me personally and in many ways for my government, this is a hypothetical question.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point in time,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that might prevail at whatever time in the future Korea is reunified. But let me say that in my personal view, U.S. will continue to have important, vital national interests in Northeast Asia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 we address those interests at this unknown time in the future, of course, will be a subject of closest consultation and discussion with our major and traditional allies in the region. Again, in my personal opinion, it would be useful to have some sort of U.S. security presence in the regio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our interests here are permanent and will continue. Therefore, there will be a requirement for continued U.S. engagement in the region. The form of that engagement will depend upon on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and the desires and the wishes of our traditional partners in the region.

Q. Koreans are concerned about the talk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ended recently without progress in Berlin. Could you tell us when the proposed high-level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resume and what will be the agenda?

A. I don't think too much should be read into the fact that there was no dramatic announcement after the last meeting in Berlin. This dialogu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has been going on for some time and we expect it to go on in the future. Not every meeting is going to produce dramatic results. My understanding is that we expect this process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Obviously, we cannot predict nor control the pace or speed at which it moves forward because it is as dependent on North Korea as it is on the U.S. But in the meantime, our contact with North Korea continues through regular channels and we look forward to the process that was outlined in William Perry's report.

Q. In your opinion, when do you see the reunification of Korea? When do you think diplomatic normalization for the U.S. and North Korea would be possible?

A. Those are both questions to which, unfortunately, I am unable to give precise answers. Clearly, the question of when Korea will be reunified is, understandably, the subject of intense

interest to virtually every Korean. Frankly, I am less concerned with when than how. For a long time, the U.S. has and continues to strongly support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why we strongly support President Kim Dae-Jung's efforts at engag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immediate objective of this policy is to reduce tensions and bring about greater stability,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Korean Peninsula. What I would stress is that the U.S. has no ambivalence about its desire ultimately to see the Korean Peninsula unified. But I can't even give you an approximate estimate of when that might happen.

The U.S. and North Korea have taken some first steps down what I would expect to be a very difficult and long road. And as you all know from reading the Perry report, the process is based upon tight reciprocity: the U.S. takes actions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to which North Korea satisfies our concerns in the security area, particular with regards to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or our part, we have been prepared for several years to establish liaison offices in Pyongyang and vice versa. However, the North has so far been hesitant about moving forward. Perhaps that will change in the future and we remain prepared to move ahead on it. I think it is an obligation for South Korea to prepare for unknowable events that seem inevitable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I think this is a very powerful argument for the need for Korea to develop a world-class financial system through reform and restructuring. When reunification occurs, Korea will need enormous amounts of capital, much of which will have to come from abroad. The foreign capital will come only if Korea has a modern transparent system of capital markets, which give foreign lenders and investors confidence.

Q. Korea is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currency crisis. What role did the U.S. play in this process?

A. As I said in my remarks, overcoming this crisis has been due primarily to th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people. I don't think that others should try to take credit for Korea's success. However, Korea did act within a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I think was very important. The IMF,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effort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were all designed to support Korea's recovery and reinforce Korea's commitments to reform and restructuring by tying money to follow through on those commitments. I think it has worked. But,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should recognize the enorm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Korea. I think Korea should have a sense of quiet satisfaction that Korea has come as far as it has, but Koreans should also have a sense of quiet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push for reform and restructuring, without which all the previous efforts might render useless.
